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8. 11.(목)<br>업무보고 종료 후 | 배포 일시 | 2022. 8. 11.(목)        |
| 담당 부서 | 정책기획관실<br>기획재정담당관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공두표 (044-200-51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서기관 엄익환 (044-200-5121) |

## 도약하는 해양경제,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

- 8.11 「새정부 해양수산 정책방향」 업무보고
- ①지속가능한 수산업·어촌 구조 마련, ②세계 선도 해산물류체계 구축, ③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, ④깨끗한 바다·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·12개 핵심과제 중점 추진

### 1.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

- ① **(수산업)** TAC 적용 확대,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, 노후 위판장 현대화
- ② **(어촌)** 어촌 개선 '신활력 증진사업' 추진,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
- ③ **(도서주민 교통복지)**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(40개) 제로화

### 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산물류체계 구축

- ④ **(해운산업)** 선박 투자자 세제 혜택 추진, 선박 매입·임대 전문 리스사 설립
- ⑤ **(항만물류)** 광양항·진해신항 완전 자동화, LNG급유시설·수리조선소 구축
- ⑥ **(물류난)** 물류난 완화시까지 수출기업 지속 지원(선적공간, 화물보관소 등)

### 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

- ⑦ **(해양레저)** 마리나 거점 확대,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, 낚시복합타운 조성
- ⑧ **(신산업)** 해양바이오산업·해양교통산업 전략적 육성
- ⑨ **(극지·해저)**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구축, 해저 체류기술 개발

### 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

- ⑩ **(해양생태계)** 해양보호구역 확대, 수족관 고래 해상방류
- ⑪ **(재해예방)** 재해 예·경보 구축, 재해 적응형 완충구역·항만 조성
- ⑫ **(해양공간)** 질서있는 해상풍력 추진, 지자체 해상경계 확정

-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(목)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.
-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①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, ②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, ③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, ④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.

## 【신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】

### 1. 지속가능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

-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, 수산물 유통·가공 구조를 개선한다.
  - 총허용어획량 제도(TAC)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%까지 확대('21년 29%)하고,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'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하여 노후화된 수산물산지 위판장을 저온·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,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불('21년 7억불)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.
  -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,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.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(6~10월)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.
- 어촌 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인다.
  -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“거점형”, “자립형”, “정주유지형”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“어촌 신활력 증진사업”을 본격 추진한다.(9월 중 세부내용 발표)

특히,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“거점형” 사업의 경우 어촌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·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**내년부터** 소규모 어가,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**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**을 지급한다.
-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**40개 소외도서**에 **선박 투입**을 지원하여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.

## 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산물류 체계 구축

□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.

-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,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‘조세리스제도’ 도입을 추진한다.
- 또한,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**정책금융 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(21→36억불)**하는 한편,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‘26년까지 선박 매입·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.

□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.

- **국내 기술을 활용하여** 광양항에 **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**를 구축(’26)하고, 부산항 진해신항을 **스마트 메가포트**로 조성(’29)한다. 또한, 국내 주요 항만에 **LNG 급유시설·수리조선소**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 서비스를 도입한다.

□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.

- ‘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**임시선박 투입, 중기·농수산물 전용 선박 배정**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,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.

### 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

□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(해양레저관광, 해양바이오, 新해상교통서비스 등)을 집중 육성하여 15조 원 시장을 창출한다.

○ 거점형 마리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하여 마리아 산업을 육성하고,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. 이와 함께,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('23년 마스터플랜 수립),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.

○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, 동·서·남 권역별 육성 거점('23년 선정)을 구축한다.

○ 디지털 해상교통, 자율운항·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, 선박의 첨단 소·부·장 기술\* 개발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.

\*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,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,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

□ 극지·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한다.

○ 극지·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,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('26)한다.

○ 수중 데이터센터,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.

□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.

○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(7→11개)하고,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까지 키워간다.

#### 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

##### □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

-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, 수거·처리,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, **해양보호구역** 면적을 우리 영해의 **17%**(’21년 9.2%) **까지 단계적으로 확대**한다. 아울러 **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** 등을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.
- 최근 관심이 높아진 **상괘이, 돌고래** 등 **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**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·전시 중인 **남방큰돌고래(비봉이), 흰고래(벨루가)**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.

##### □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, 해양공간 관리를 강화한다.

-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,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**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**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**해상 예·경보 시스템** 구축에 착수하고, 침식·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**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**을 구축한다.
-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. 아울러 지자체 간 **해상경계를 획정**하기 위한 **법률 제정**을 추진하여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.

##### □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, 해운, 항만 등 **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·스마트화**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, **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**을 적극 **발굴**하는 것이 필요하다”라며, “**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## 비전 및 목표

“도약하는 **해양경제**, 활력 넘치는 **바다공동체** 구현”

- 어 가 소 득 : ('21년) 5,200만원 → ('27년) **6,500만원**
- 국 적 선 대 : ('21년) 9,300만톤 → ('27년) **1억 2천만톤**
- 신산업 매출 : ('21년) 3.5조원 → ('27년) **15조원**
- 1등급 해역 : ('21년) 11개(42%) → ('27년) **16개(62%)**

## 핵심 추진과제

## 1.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

- ▶ **(수산업)** 지속가능한 생산, 소비자 선호 반영 유통 구조 마련
- ▶ **(어촌)** 정주여건·소득·복지 개편, 청년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
- ▶ **(연안여객)** 소외도서 제로화로 도서주민의 보편적 교통권 보장

## 2.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

- ▶ **(해운산업)**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,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
- ▶ **(항만물류)** 항만 스마트화, 서비스 다양화로 부가가치 제고
- ▶ **(물류난)** 선적공간, 화물 보관장소 제공으로 물류난 극복 지원

## 3.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

- ▶ **(유망산업)** 해양레저관광·해양바이오·해상교통 등 **유망신산업** 육성
- ▶ **(과학기술)** 극지 연구 확대, 해저 공간 창출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
- ▶ **(창업투자)** 연안권 창업투자 지원, 모태펀드 투자 확대

## 4.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 조성

- ▶ **(해양생태계)**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, **해양보호구역** 확대
- ▶ **(연안재해)** 사전 예·경보,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
- ▶ **(해양공간)** 질서있는 해상풍력, 해상경계 획정으로 갈등 완화

## [1] 지속가능한 수산업,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.

### ① 수산업 **지속가능 생산 + 유통·가공 구조 개선 → 식량주권 강화**

- 잡는 어업은 ❶자원관리형 어업 구조 강화, 기르는 어업은 친환경 ❷스마트양식으로 전환

▪ 대서양 연어 국내 생산 개시('25)

❶총허용어획량 적용 확대(생산량 29 → 60%), 바다숲(여의도 면적 62배) 조성

❷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소(부산, 양양, 포항, 경남 고성, 신안, 제주) 구축(~'26)

-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위판장 현대화

- 김(7억불)을 식품수출 최초 10억불 품목으로 육성

- 정부비축물 방출, 상생할인 행사 확대(4회)로 가격 안정화 유도

▪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(239억원) 신속 집행(6~10월)

### ② 어촌 **정주여건 개선, 소득 안전망 구축 + 귀어귀촌 확대 → 자생력 제고**

- 어촌(300개) 유형별로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“新활력 증진사업” 추진

\* (예시 : 거점형) 공공 300억원 + 민자 100억원, 복합생활시설, 유통판매시설 등 건립

-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('23)으로 소규모 어가 소득 제고

- ❶주거+❷일자리+❸기술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귀어귀촌 활성화

❶임시주거시설 제공('22), ❷어선('22)·양식장('23) 임대 제공, ❸귀어학교 확대('22)

### ③ 연안여객 **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**

-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소외도서 제로화

## [2]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### [1] 해운산업      투자 인센티브 + 공공 역할 재정립 → 시장기능 활성화

- HMM 민간이양 여건 조성
- 선박투자 세제혜택 도입(조세 예타, '22.9), 선박펀드 확대(21→36억불)
  - 불황기에 대비하여 선박 매입·임대 전문 리스사 설립('26)

### [2] 항만물류      자동화 전환 + 서비스 다양화 → 초일류 경쟁력 확보

- 부산항 신항 완전 개장('26)으로 물량처리 능력 11% 제고
-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(자동하역, 무인수송) 테스트베드 구축('26)
  - 부산항 진해신항은 스마트 메가पोर्ट로 건설('29, 1단계)
- 항만 배후지역을 제조·물류기업의 첨단 산업공간\*으로 조성
  - \* IoT 기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('25), 해외 U턴 기업 배후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
- LNG 급유시설('24, 울산)·수리조선소 설치('26, 부산) 등 서비스 다변화

### [3] 물류난 극복      선적공간 제공 + 인프라·제도 강화 → 기업애로 해소

- 임시선박 지속 투입, 중소기업·농수산물 전용 선적공간 제공
- 수출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운영(부산)

### [3]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.

#### ① 유망신산업 **인프라 투자 + R&D 지원 → 연매출 15조원 시장 창출**

- 마리나 거점 확대,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
    - 레저·관광·문화가 결합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('23, 마스터플랜)
    - 낚시·물놀이·용품산업이 결합된 낚시복합타운 건립(3개소)
  -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 국산화(30→50%) 지원,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
  - 디지털 해상교통정보(전자해도, 바다 Navi. 등), 자율운항·친환경 선박 기술 고도화, 선박 첨단 소·부·장\* 기술 개발 등 해상교통산업 육성
- \*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,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,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

#### ② 과학기술 **극지·대양 연구 확대 + 해저 공간 창출 → 글로벌 위상 강화**

- 남극 내륙기지 건설(세계 6번째),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('26)
  - 해저 채류기술(수심 30m, 3인, 30일) 개발('26)
- \* IT기업 수중데이터센터, 잠수사·우주인 훈련 공간, 생명·의료 연구 등 수행 기대

#### ③ 창업투자 **창투센터 + 모태펀드 확대 → 신산업 대표기업 육성**

- 전국 연안권 창투지원센터 설치(7→11개), 모태펀드 확대(3천→5천억원)

## [4] 깨끗한 바다,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.

### ① 해양생태계    해양쓰레기 저감 + 해양보호구역 확대 → 건강성 회복

- 해양쓰레기 ①발생 - ②수거·처리 - ③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로 '27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% 저감
  - \* ①어구·부표 보증금제, 스티로폼 소재 대체 인증부표 100% 보급('24), ②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('23, 7척), One-Stop 처리선박 개발('26), ③재활용 전문업체 육성
-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의 17%(現 9.2%)까지 확대, 국가해양정원 (가로림만) 등 생태관광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
  - 수족관 남방큰돌고래('22.3분기) 및 흰고래(벨루가, '23.下) 해양방류 추진

### ② 연안재해    예·경보 강화 + 안전인프라 확충 → 사전 예방체계 구축

- 해일, 이안류 등 해양 재난 도착 30분전 알람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- 침식·재해 고위험 해안가(20개소)를 완충구역으로 전환
  -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한 재해안전항만(61개소) 구축('24~)

### ③ 해양공간    해상풍력 상생 유도 + 해상경계 획정 → 해양공간 갈등 완화

- 어업인 상생·협력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사업 추진 지원
-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(가칭) 「지자체 해상경계법」 제정('23)